

#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 당내 비명계 반발 고려...정치탄압 여부 당무위서 판단해 구제 비대위 구성요건 '대표·최고위 과반 결의' 신설...與 내홍 염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안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진영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에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 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

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

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기타 강령 등 안건을 먼저 의결한 뒤 당헌 개정 문제만으로 1시간 30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에서 논의된 사안과 어제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 비대위원들이 수렴한 당내 의견을 종합해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오전 내내 논의했다"며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신설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결의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 尹대통령 "저부터 더 분골쇄신하겠다"

## 취임 100일 첫 회견 "국민 안전, 국가 책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상식 복원"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

신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에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이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약 20분 동안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고 전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뒤 "경제 기조를 철저히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

부는 총 1천4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을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스 항공노선 재개, 5천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그간 정부의 성과로 밝혔다.

노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어민 강제복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 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7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의 처

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 행정절차상 2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野 "빈수레 요란... 낮부끄러운 자화자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낮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빈 수레만 요란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00일 간의 성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나 낮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면서 "국민의 인적·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 '다시 행하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정치적인 국면 전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 민주 전준위, 농정 관련 강령 개정안 의결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 "지난 7월부터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 개정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의원)에 적극적인 의

견 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농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